

# 정치인 체포 지시·국회 계엄해제 방해·의결 절차 3대 쟁점

###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 오늘 마무리 최종 변론 2주일가량 뒤 재판관들 평의 거쳐 선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이 25일 헌법재판소(현재)에서 열린다. 헌재가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종 진술에 나선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라는 점과 현재가 윤 대통령과 국회 소수인단의 최후진술을 무제한으로 허락했다는 점 등에서 양측의 주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재판관들이 10차까지 이어진 변론에서 질문을 던진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국회 등 계엄군 투입, 이른바 '정치인 체포조' 관련 사항 등 핵심 쟁점들도 주목된다.

◇탄핵절차 마무리 = 25일 오후 2시부터 현재 대 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기일인 11차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이날 변론기일은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이 제출한 서면 증거 검토부터 시작된다. 증거 조사가 종료되면 양측 법률대리인단의 최종 진술이 진행된다. 현재는 양측에게 각 2시간씩의 최종 변론시간을 부여했다.

먼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현재에 청구한 국회 측이 탄핵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이어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탄핵의 부당성을 주장한다.

형사 재판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이 먼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을 밝히고 구형을 요청한 뒤 피고인 변호인이 변론하는 방식이 그대로 인용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회 탄핵소추 위원장이자 국회 법사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정래 의원과 윤 대통령이 직접 최후변론에 나선다. 현재는 양측에 '시간 제약 없이' 최종 의견 진술을 허용하겠다고 했다.

◇마지막까지 다룰 쟁점은 = 현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총 16명의 증인을 불러 17차례 증언을 들었다. 홍장원 전 국장원 1차장은 두 차례 증언에 섰다.

그동안 현재에서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나온 양측의 질문이 결국 탄핵심판의 쟁점이 될 것으로 법조계는 분석하고 있다.

비상계엄 절차의 위법 위헌적 요소, 정치인 체포 지시, 국회봉쇄로 인한 국회적외 및 계엄해제 의결 방해,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지시 등이 그것이다.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이 법에서 정한 선포 요건

에 맞지 않아 위헌·위법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계엄을 선포해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포고령 1호도 위헌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헌법기관을 봉쇄하도록 지시해 헌법을 위반했다는 점도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계엄이 야당의 줄 탄핵과 입법 횡포 등에 기인한 것이었다는 기존의 변론 전략을 강조하면서 국민에게 호소하는 전략을 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기존에 주장했던 평화적 계엄이라는 주장도 거듭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계엄 진행 과정에서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결과적으로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계엄 전 진행된 국무회의도 정상적인 절차를 진행했다는 주장도 할 것으로 보인다.

◇선고까지 남은 절차는 =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마지막 변론기일 이후 2주일가량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주가량 동안 현재 재판관들의 의견을 모으는 평의 과정을 거쳐 선고하게 된다. 최종 변론기일을 마친 뒤 보통 일주일 이내에 평의를 연다.

평의에는 8명의 재판관 모두 참석해 각자 의견을 밝히고 표결한다. 노 전 대통령 때는 11차례 평의를 열고 탄핵 기각 결정을 했다. 박 전 대통령 때는 평의를 8차례 열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했다. 평의에선 주심재판관인 정형식 재판관이 쟁점에 대한 검토 내용을 요약해 발표한다. 이후 다른 재판관들도 의견을 낸다. 모든 평의가 이뤄진 뒤 최종적으로 표결하는 평결을 한다.

평결에서는 주심재판관이 의견을 내고, 임명 일자가 가까운 후임 재판관부터 차례로 의견을 낸 다음 재판장이 마무리한다.

결정문 초안도 주심인 정 재판관이 다수 의견을 토대로 작성한다. 주심이 소수의견을 낼 경우 다수 의견 재판관 중 한 명이 초안을 작성한다. 이후 재판관 전원이 검토 과정을 거친 뒤 최종 확정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전남에 국립의대 신설...이제 정부가 약속 지킬 차례”

### 국회 대토론회·범도민 결의대회 국회의원·도민 등 600여명 참석

지역민들이 국회에서 한 목소리로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촉구했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와 범도민 결의대회'가 이날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는 13명의 국회의원(박지원·이개호·서삼석·신정훈·전현희·김원이·주철현·권항엽·김

문수·문금주·서미화·조계원·천하람) 공동 주관으로, 전남 국립의대 설립 범도민추진위원회, 목포·순천대, 국회 좋은정책포럼이 공동 주최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3월 정부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약속한 '전남 국립의대 설립 추진'의 조속한 이행을 정부에 촉구하고 결의문을 통해 국립의대 설립에 대한 200만 전남도민의 간절한 염원과 강한 의지를 전달했다.

범도민추진위원회는 결의문에서 "이제는 정부가 약속을 지킬 차례로,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의료계와 대타협을 하되, 전남도 국립의대 신설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달라"고 건의했다.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주제 발표와 전남의 열악한 의료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도 이어졌다. 허정 공동위원장은 "전남 국립의대 설립은 지역 필수 의료 확충과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정부는 전남도민의 간절한 외침에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정부의 1도 1국립대 정책에 부합하는 목포·순천대 '대학통합'을 이끌어내 지난해 11월 22일 '전남 통합대학교 국립의대'를 정부에 추천한 상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국힘, 소상공인에 '100만원 바우처' 지급 추진

국민의힘은 24일 전국 영세 소상공인에 공과금 등 지원 목적으로 1인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활용해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소비쿠폰)을 추진하는 것에 맞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종로구 창신동의 한 분체 업체에서 연 간담회에서 "지급 경기가 어려

운 상황에서 특히 영세기업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며 "1인당 100만원 정도 바우처 형식으로 전기·가스·수도 등 공과금 지원 방안을 정부 측과 협의 중"이라고 했다. 이어 "나라에 있는 돈을 어떻게든 25만원씩 뿌려서 여유 있는 사람한테도 돌아가는 게 아니라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어려운 분들께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잘 듣고 정책을 제대로 만들어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野 '명태군 특검법' 법사소위 의결

### 27일 본회의 처리 방침 輿, 법안 내용 반발 퇴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어 '명태군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군 특검법)을 의결했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은 특검법안 내용에 반발해 소위 회의장에서 퇴장한 채 표결에 불참했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태군 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명 씨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됐다는 의혹

이 수사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태군 씨 등이 관련돼 있고, 이를 통해 공천 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2022년 대우조선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의 주요 의사결정에 명 씨와 김 여사 등 민간인이 개입해 국정농단이 있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야당은 이날 통과된 '명태군 특검법'을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뒤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광주문화신협**

# 광주문화신협 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